

## 아침세평

## 김홍석

G-Kunst연구소장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4달째에 접어들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K-컬처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후에도 “문화가 곧 경제이며, 국제 경쟁력의 핵심”이라 밝히며 K-팝, K-드라마, K-뷰티 등을 통한 산업적 성장을 적극 추구하고 있다.

실제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 개막’이라는 구호처럼 문화의 산업화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

또한, 국정기획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라는 비전으로 K-컬처시대 핵심콘텐츠 연관산업 육성과 K-컬처의 근간, 문화예술 창작역량·창유기반 강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문화예술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화의 산업적 측면을 강조하는 정책이 과연 예술의 본질과 다양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초예술, 지방문화, 전통예술과 같은 비수익성 분야는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으며, 이는 문화생태계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기초예술은 대중성이나 수익보다는 실험성과 창의성, 예술 그 자체의 가치에 중점을 두는 분야다.

## 기고

## 정은성

호남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RISE 사업은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대학 지원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혁신적 정책이다.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를 기르고,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혁명연구 급감으로 지방대학이 존재 위기에 내몰린 현실에서, 지역과 대학이 손잡고 활로를 찾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광주만의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인가? 바로 ‘스포츠와 문화의 도시’라는 고유한 정체성에서 답을 찾았다.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는 143개국 1만3000여 명이 참가한 성공적인 국제대회였고,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역시 194개국 선수들이 찬사를 보낸 모범적 운영 사례였다. 이런 경험과 인프라가 바로 광주의 경쟁력이다.

하지만 과거의 성과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 스포츠관

## 문화강국 향한 길, 기초예술·지역문화 소멸막아야

연극, 무용, 시각예술, 전통예술 등은 상업적 흥행과는 거리가 멀지만, 예술 생태계의 다양성과 깊이를 책임지는 중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민간 자율성과 시장 중심을 강조하며, 공공의 역할을 점차 축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기초예술 분야의 재정적 기반을 위협하고, 결국 창작 환경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낳을 것이다.

지난 2024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는 이러한 위기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예술인들의 연평균 예술 활동 소득은 1055만원, 월평균 88만원 수준에 불과하며, 무려 31%는 예술 활동에서의 소득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많은 예술인들이 생계를 위해 부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창작 활동이 단절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한국 문화의 지속성과 창의성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

지방문화 생태계의 붕괴 또한 심각하다.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인프라와 예산,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방 예술인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중앙정부의 지원은 축소되고 있으며, ‘행정 효율화’라는 명목과 복권기금 고갈로 인한 지특화책 전환으로 지역 문화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의 고유한 문화 콘텐츠는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으며, 지역 예술단체와 활동가들의 기반도 흔들리고 있다. 지방정부가 자력으로 문화를 지탱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분명하다.

전통예술 분야 역시 위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악, 민속예술, 무형문화재 등은 한국 문화의 뿌리이자 정체성을 담고 있지만, 대중성과 상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

## 광주 RISE사업과 스포츠관광 인재 양성의 과제

광은 이제 단순한 경기 관람이나 체육 활동을 넘어 문화, 웰니스,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전 세계 스포츠관광 시장 규모는 연간 약 6000억 달러에 달하며, 아시아 지역만으로도 연평균 약 8% 이상 성장하고 있다. 광주가 이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 서려면 새로운 관점의 스포츠관광 인재 양성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융복합적 사고를 지닌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역 대학의 관광경영학과와 스포츠관광 서비스 기획 능력, 스포츠레저학과와 스포츠 전문 지식,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와 콘텐츠 제작 역량, 항공서비스학과와 글로벌 매니가 하나로 결합될 때 진정한 경쟁력이 생긴다. 각 학과가 개별적으로 인재를 길러내는 기존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시장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

특히 광주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청년 일자리와 지역 정주다. 많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실에서, 지역 내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스포츠관광 산업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분야다. 의료·웰니스 관광, 국제대회 유치, K-컬처와 연계한 스포테인먼트 등 다양한 영역이 지역 청년들의 도전 무대가 될 수 있다.

공연 기회의 감소, 후계자 부족, 창작 기반의 붕괴 등으로 인해 전통예술은 점차 단절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유산을 잃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뿌리 없는 문화를 살아가게 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특히 지방 소극장의 위기는 이 모든 문제의 상징과도 같다. 소극장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지역 예술인의 창작과 실험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문화 공간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객 감소와 재정난으로 운영이 어려워졌고,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 지원 부족으로 인해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권 박탈은 물론, 젊은 예술인의 활동 무대 자체가 사라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물론 문화의 산업화는 시대적 흐름이며,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문화는 단지 상품이나 소비재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한 사회의 정체성과 기억, 공동체 정신을 담는 공공재이자 미래 자산이다.

따라서 문화정책은 단기적 수익성과 효율성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반드시 존재해야 할 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의 공공적 책임이 요구된다.

문화강국은 단지 K-컬처의 글로벌 인기를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지역 곳곳에서 창작의 불씨를 살리고, 실험적이고 독립적인 예술이 살아 숨쉬며, 전통이 현재와 조화를 이루는 문화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서 진정한 문화 선진국의 모습이 나온다.

문화강국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기초예술과 지방문화, 전통예술의 소멸을 막기 위한 실질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ISE 사업이 전국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광주는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스포츠관광은 바로 그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광주만의 문화적 자산과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해 인재를 길러낸다. 이는 지역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길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실행력이다.

전국 모든 지역이 RISE라는 같은 출발선에 서지만, 광주가 스포츠관광이라는 차별적 비전으로 앞서 나간다면 ‘문화·스포츠·관광 융합도시’라는 독자적 브랜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길 위에 청년들의 희망과 지역의 미래가 함께 열릴 것이다. 스포츠관광 인재 양성은 단순히 몇 개 학과의 문제가 아니다. 광주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전략이다. 청년들이 고향에서 꿈을 펼칠 수 있고, 지역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광주만의 독창적 브랜드 ‘문화·스포츠·관광 융합도시’를 완성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제 광주시와 지역 대학들, 그리고 시민들 모두가 나서야 할 때다. 반드시 성공시켜 전국의 롤모델이 되고, 나아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포츠관광 도시로 우뚝 서야 한다. 그 길 위에 광주의 미래와 청년들의 희망이 함께 열릴 것이다.

## 독자투고

## ‘공권력’ 낭비하는 ‘고소·고발’ 멈춰야

개인 사이의 사소한 다툼이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권력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소·고발 사건의 급증은 경찰의 수사력 분산의 원인으로 작용돼 정작 중대한 범죄를 제때 수사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의 고소·고발 반례제 폐지 이후 단순 민원성 사건까지 무조건 접수되는 구조가 겹치면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수사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1인당 수십 건에서 백 건에 가까운 사건을 배당받아 솜조차 설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무차별 고소·고발은 거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고소·고발 남발이 사회 전반에 퍼지면서 경찰 수사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정작 아주 중요한 수사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의 수사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반례제가 폐지되고, 모든 사건을 일률적으로 접수해야 하는 현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이재복 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장

## OPINION

2025년 9월 4일 목요일

## 사설

## 골목형상점가 지친 지역경제 활력주길

광주 북구가 관내 모든 상점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한다. 이는 123개 상점가 1만3440개 점포에 달하는 것으로 전국 최대 지정이다.

여기에는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공통 목표달성을 위한 공직자들의 헌신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어우러진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북구는 지난 2020년 광주지역 최초로 전남대 후문과 황계마을 상권 등 2곳을 골목상권으로 지정했다. 이후 관내 27개 동마다 1곳 이상의 골목형 상점가 조성을 위해 지정기준 완화, 주민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다. 북구는 4일 ‘골목형 상점가 전 지역 지정 선포식’ 행사를 개최한다.

북구 뿐만 아니다. 광주 서구도 지난 6월 18개 전체 동 119곳 상점가, 1만1426개 점포를 지정했고 남구도 지난 8월 전체 17개 동 82개 상권 6660개의 점포를 지정했다. 다시말해 남구, 서구, 북구 모든 상점가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것이다.

골목형 상점가가 5개소에 불과했던 동구도 최근 두 달 새 31개소를 늘려 총 36개 상점가 2626개 점포를 확보했고 지난 2021년 1개소에 불과했던 광산구도 올해 87개 상점가 점포 수 8637곳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골목형 상점가는 447개 상점가, 점포수 4만2789개에 이른다.

광주 자치구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정부가 올해부터 자치단체 자율 지정 등 조건을 완화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으로 이만한 것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골목형상점가가 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상시 10%로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상인들은 카드 수수료 완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의 전통시장·상점 활성화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돼 골목 상점 시설이 노후화하거나 상권이 침체했을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비 쿠폰·지역 화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골목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가 잠재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전공의 복귀...필수의료 인력난 여전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했다. 이에 따라 1년반동안 지속됐던 의료현장의 진료 공백이 일부 메워졌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3대 분야 지원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난은 여전하다.

전남대병원원은 최근 하반기 인턴 108명, 레지던트 1년차 102명, 레지던트 상급년차 180명 등 전공의 총 390명에 대한 모집공고를 내 244명(지원율 62.6%)을 총원했다. 조선대병원도 인턴 35명, 레지던트 1년차 45명, 레지던트 상급년차 79명 등 전공의 159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내 122명(지원율 76.7%)을 선발했다.

현재 정원 대비 70%가량의 전공의들이 중환자 진료와 응급의료, 입원 관리 등 진료에 나서면서 의료 현장의 과부하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있다.

문제는 필수의료 중심의 비인기과는 여전히 지원 기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남대병원 레지던트 상급 연차의 경우 내과 31명 모집에 23명, 정형외과 14명 중 13명, 피부과 6명 중 5명, 안과 5명 중 5명 등에서는 정원에 가깝게 채용했지만 소아청소년과는 정원 11명 중 2명, 외과 9명 중 3명, 산부인과 9명 중 3명만 채용했다.

레지던트 1년 차도 비교적 채용이 원활한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와 달리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는 정원이 5~6명이었지만 지원자가 없어 각각 1명씩만 채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선대병원도 마찬가지다. 내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 대부분 과에서 정원에 근접한 채용률을 보였지만, 소아청소년과는 정원 9명 중 1명, 산부인과는 5명 중 2명만 채용했다.

이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이른바 ‘필수의료 3대 과목’의 경우 의료서비스 수요는 높은 반면, 업무 강도가 높고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데 다 수익성마저 상대적으로 떨어져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의정 갈등 이후 이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필수 의료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 주필 김상훈                                                                                                                     | 편집국장 최현수                                                                                                                                       |
|-----------------------------------------------------------------------------------|----------------------------------------------------------------------------------------------------------------------------|------------------------------------------------------------------------------------------------------------------------------------------------|
| <b>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b><br>우편번호 61234<br>대표전화 (062) 370-7000<br>팩스 (062) 385-5400 | 정 치 부 370-7010<br>경 제 부 370-7020<br>사회교육부 370-7030<br>지역사회부 370-7040<br>문화체육부 370-7234<br>편 집 부 370-7082<br>사 진 부 370-7050 | 논 설 실 370-7060<br>뉴미디어본부 370-7222<br>임 원 실 370-7000<br>총 무 국 370-7093<br>사 업 국 370-7090<br>광 국 국 370-7070<br>독자관리국 370-7080<br>서울지사 02-78-7090 |
| 1995년 12월 12일 창간<br>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